“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하면 위생매립장 수명 3배 연장”

광주시·정부감사반, 환경부에 사업 추진 건의

광주시가 광역위생매립장의 폐기물에서 분리된 가연성분을 연료화하고 이를 통해 매립장의 수명을 2~3배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이같은 방안은 현재 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정부합동감사반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필요성에 대해 공감, 시와 함께 환경부에 협조 요청을 했고 환경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남구 양과동에 위치한 광역위생매립장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매립을 시작했으며 오는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2·3단계 공사가 완료될 경우 전체 면적은 58만4천 301㎡, 매립용량은 973만3천㎥로 최장 2034년(사용 년수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매립장 건설은 계획에서 준공까지 빨라야 7년 이상 소요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완료시점인 2023년쯤에는 또 다른 위생매립장 조성계획을 입안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위생매립장에 전처리시설(MBT·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을 설치, 폐기물에서 분리된 가연성분을 고형연료(RDF·Refuse Derived Fuel)로 만들어 발전시설로 자원 회수를 추진키로 했다.

전처리시설은 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을 가연성과 유기질, 무기질 등으로 분류하는 시설이며, 고형연료는 여기서 분류된 가연성 폐기물을 압축해 발전용으로 만든 것이다.

광주시의 경우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비닐·종이류 등 가연성이 93.2%로 전국 평균 50~60%에 비해 많아 이를 연료화할 경우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시는 폐기물에서 가연성분을 분리해 연료화하고 발전시설로 자원을 회수하면 매립량이 적어져 매립장 사용 연한을 적게는 2~3배, 많게는 10배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청정연료의 사용)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인 광주시는 발전시설에 LPG나 LNG 등 청정연료나 경유만 사용하도록 돼 있어 고형연료(RDF)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이에 대해 정부합동감사반은 최근 시의 위생매립장 여건과 RDF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우려를 없애기 위해 RDF 발전 설치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기준을 소각시설 이하로 설정하고 경제성있는 광역시 단위의 위생매립장 1개소에 이를 설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광주시를 통해 환경부에 협조요청했다.

시는 고형연료 발전을 통해 시간당 10㎿의 전력을 생산, 약 6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으며 비(非) 화석연료를 사용한 발전이 가능해져 1년에 약 10억원 상당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전처리시설을 설치해 고형연료를 만들 경우 이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과 환경호르몬이 배출되고 악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선진국의 전처리시설 및 고형연료 제작시설을 도입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5·18묘지 참배 행렬 5·18 광주민중항쟁 28주년을 앞두고 국립5·18묘지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배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6일 5·18묘지를 찾은 광주 이화유치원생들이 추도의 묵념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교사들 학교 밖 생활지도 순찰 활동

광주 지역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교 밖 생활지도를 위해 직접 순찰에 나섰다.

6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최근 교외생활지도 협의회를 발족해 청소년 탈선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협의회는 경찰 지구대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한 18개 권역별로 대표 교사를 위촉해 정기적으로 순찰활동을 펴기로 했다.

대표교사 20명은 매주 둘째와 넷째 금요일 방과 후에 우범지대를 순찰하고 찜질방, 술·담배 판매 업소 등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또 대표교사 외에도 256개 학교 생활부장 교사 등이 수시로 학교 주변 지역을 순찰, 청소년 범죄나 탈선행위에 대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강필상기자 kps@

서울 사립대 7곳 23일 광주설명회

24일엔 전남 설명회

서울 소재 사립대 7곳이 5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제주 등 전국 12개 도시에서 공동 입학설명회를 가진다.

공동 입학설명회에 참여하는 대학은 고려대 · 서강대 · 성균관대 · 연세대 · 이화여대 · 중앙대 · 한양대 등이며 수시 모집요강, 논술과 구술고사 관련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설명회는 오는 23일 오후 6시 광주 여성발전센터에서, 전남설명회는 24일 오후 2시 광양 백운아트홀에서 각각 열린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5·18 테마열차’ 출발

광주도시철도공사 3개월간 운행

5·18민중항쟁 28주년을 맞아 5월의 역사를 실은 테마열차<사진>가 6일 운행을 시작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와 재단법인 5·18기념재단(이사장 윤광장)은 이날 남광주역에서 5·18 테마열차 발차식을 갖고 3개월간 운행에 들어갔다.

테마열차 운행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5·18에 대한 살아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하루 왕복 40여회 운행된다.

총 4량으로 편성된 테마열차의 첫 번째 칸에는 광주인권상 역대 수상자 및 활동, 두번째에는 광주국제평화포럼 프로그램, 세번째엔 청소년문화제, 네번째에는 5·18 민주항쟁 소개와 재단의 교육사업 내용이 디자인됐다.

또 전동차 안팎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 큰 희망을 만듭니다’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그림을 활용, 희망차고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담았다.

오행원 사장은 “이 열차가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은 물론 5·18에 낯선 젊은 세대들에게도 5·18에 대한 긍정적이고 밝은 이미지를 심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

광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해마다 늘어

작년 학생 1인당 20만원 꼴 거둬

광주시내 중학교들이 학교운영지원비를 해마다 늘려 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시 교육위원회 윤봉근 위원은 6일 열린 교육위 임시회에서 “1994년 초등학교에서는 폐지된 육성회비 성격의 학교운영지원비가 같은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에서는 오히려 납부금액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내 중학생의 1인당 연간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금액은 ▲2001년 15만4천320원 ▲2002년 16만1천160원 ▲2003년 16만9천200원 ▲2004년 18만840원 ▲2005년 18만9천600원 ▲2006년 19만4천400원 ▲2007년 20만400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중학생 7만294명 가운데 면제·감면·지원받은 7천294명 가량을 뺀 나머지 학생들로부터 126억7천369만원을 징수했다.

각 학교에서는 2006년 결산 기준으로 학교운영지원비의 63%를 학생복리비, 교수학습활동비,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등 학교운영비에 썼으며 학교회계 사무보조원 인건비에 18%, 교원연구비에 16%, 직책수당 및 관리수당에 3%를 사용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